

중국 지속성장의 한계: 정치사회적 병목을 중심으로

이희옥*

이 글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담론 속에 과도하게 적재된 중국기회론과 중국낙관론을 점검하는 데 있다. 또한 정반대로 중국의 폭발적 경제성장의 역설이 중국의 몰락을 가속화하여 중국이 러시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단선적 시각도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의 지속성장에서 정치사회적 병목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구간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중국이 당면한 위험의 성격과 수준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병목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위기관리정책의 정책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미래에 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지속성장에 있어 병목이 되는 요인을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핵심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이중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이른바 삼농문제, 실업문제, 사회적 격차를 분석하면서 이들 병목요소들이 단기간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다양한 병목요소들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2010~2015년의 병목구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점이 일차적 관건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병목이 곧 중국의 체제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해결 여부에 따라 중국의 지속성장의 가능성과 실패에 놓인 전환기적 과제라고 생각했다.

* 한신대학교 중국학 교수, leecok@hs.ac.kr

1. 문제의 소재

중국은 15세기에서 19세기말까지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다. 이후 중국은 급격한 쇠퇴를 겪었고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을 계기로 다시 세계경제의 중심을 향해 추격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대국부흥기는 대체로 2020-2050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門洪華, 2005: 3). 실제로 중국은 강대국의 자질을 상당히 갖추어가고 있고 전 지구적 군사투사력과 내부통제력의 조건을 제외하면 강대국으로 불릴만한 요건을 다수 만족시키고 있다(정재호, 2006: 50).¹⁾ 그러나 중국이 대국부흥의 길과 지속성장의 길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구문제²⁾로 야기되는 노령화, 실업, 자원부족은 물론이고 경제효율의 문제와 사스와 같은 질병이 가져다 줄 구조적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대외관계에서도 시장경제, 유엔체제, 글로벌 문명이라는 조건하에서 다극화를 추구하거나 방어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외부환경의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당정은 중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인식에 기초하여 유연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성장과 고용 사이에는 전형적인 교환관계(trade off)가 존재한다는 불균형 성장을 추구했고,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경제를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접속시켰다. 그러나 성장주도형, 대외개방형 발전모델이 새로운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나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

1) 중국이 비록 2류국가(Second-rank power)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완전한 권력 또는 포괄적인 권력(complete power or comprehensive power)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Funabashi, Oksenberg, Weiss, 1994: 2)에 동의할 수는 있다.

2) 중국은 세계 7%의 경지와 7%의 수자원으로 13억 명의 인구를 부양하며 세계 2~3%(2003년 3%)의 공공재정자원으로 13억 명에게 세계최대규모의 교육, 의료위생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은 세계 1/4의 노동자에게 취업을 제공하며 세계 1/5의 노인인구에게 양로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최대 인구가 중국의 발전에 거대한 압력이 되고 있다.

기의식의 소산이다. 중국의 위기는 단순히 성장의 지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농촌-농업이라는 이른바 삼농위기와 실업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환경파괴의 위험, 노동력구조의 왜곡 등을 수반하면서 중국사회주의 존재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³⁾

이것은 향후 중국의 발전과정이 경제개혁→고도성장→사회구조의 변화→국민의식의 변화→정치발전이라는 순차적 발전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정치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기로 접어들 경우 정치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1천 달러 수준의 국가에서는 3차산업이 발전하지만 인구·자원·환경압력이 가속화되고 소비구조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도 이익분화, 소득격차의 확대 등 사회적 모순이 심화된다. 이런 점에서 1인당 GDP 1천 달러에 진입한 이후 중국은 한국형 황금발전모델과 '성장하지만 발전하지 않는' 라틴아메리카 현상 사이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連玉明, 2005: 5-6).

따라서 중국이 지속성장의 병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현재 후진타오 체제의 국가운영의 기초는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발전이 보다 중요한 원리(發展是硬道理)'라는 덩샤오핑의 원리를 이어받고 있으나, 기존의 성장전략과는 경제에 있어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2005년 중국공산당 11기 5중 전회와 '제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조화(和諧)사회를 강조하고 선부문에 기초한 중국의 발전담론을 공동부유로 전환시키며, 기존의 중상주의적 정책을 부민(富民)주의적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중국의 부상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병목현상을 주목하면서 중국의

3) 실제로 중국전문가들은 국무원의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강좌에서도 당의 집권의 기초와 정부의 대중적 기초가 건국 이후 이렇게 위약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었다고 분석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오고 있다. 예컨대, 2003년 후안캉의 국무원 강좌원고는 胡鞍鋼(2004)을 참고.

지속성장에 대한 기적(miracle), 신화(myth) 그리고 거품(bubble)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와 중국기회론과 중국낙관론의 근거를 재검토하는 데 있다.⁴⁾ 이를 위해 중국의 지속성장의 정치사회적 병목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구간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중국이 당면한 위협의 성격과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병목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위기대응정책의 정치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미래에 대한 해석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부상과 정치경제적 병목

1) 기존의 병목요인 연구

중국사회주의의 미래와 관련하여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부조화가 결국 중국의 사회주의존재방식을 제약할 것이라는 견해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사실 중국에서는 확대된 경제공간에서 교육과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시민계급이 창출되고 있으나 정치참여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운영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 보다는 중상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고 ‘독재(dictatorship)’의 이름으로 서방세계에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성취를 통한 체제 정당화(performance legitimacy)를 통해 지체된 정치개혁을 합리화했으며 정치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과제들은 경제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형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중국이 자본주의 국제경제에 완전하게 접속하면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차이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경제성장

4) 중국부상과 중국연착륙여부가 미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으로 *The Ripon Forum*, Vol. 39, Vol. 4 (2005)를 참고.

의 질을 담보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정치와 경제의 부조화를 정치적 기술과 정치적 권위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갈수록 확대되는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격차에 의한 체제에 대한 신념의 위기에 대해 사회주의적 해답은 무엇인지, 과거 질서 있게 관리되던 집단항의사건이 구조적 위기와 결합하여 발생할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있는지, 호구제도의 철폐와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근본적 과제에 직면한 삼농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기술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실업과 저임금노동 이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사스와 조류인플레인지(AI) 그리고 에이즈와 같이 전염병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GDP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경오염과 농지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중국위협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중국의 지속성장의 병목과 관련한 연구는 대상영역이 지나치게 방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정책연구로는 The Economist지가 발행하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있다. 이에 따르면 2026년까지 중국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면서 '늪은' 중국에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사회적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⁵⁾ 그리고 미국의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보고서(Mapping the Global Future)가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병목은 경기후퇴(economic setbacks)와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이 고용창출을 통해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정치적 소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위기를 가장 우선적인 병목으로 보았다. 한편 OECD의 보고서(Economic Review China)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 도시화,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복지증대 등이 성장의 핵심적 병목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의 병목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Rand 보고서(Fault lines in China's Economic Terrain)이다. 이에 따르면, <표 1>와 같이 2005~2015년 사이 중국경제

5) <http://www.economist.com>(접속일자 2005년 11월18일)

〈표 1〉 중국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불확실한 요인(2005~2015)

유형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년)	
	2002년 분석*	2003년 분석**
1. 실업, 빈곤, 사회혼란	0.3~0.6	0.3~0.8
2. 부패의 경제적 영향	0.5	0.5
3. 에이즈, 전염병 요인	1.8~2.2	1.8~2.2
4. 물 부족과 오염	1.0~2.0	1.5~1.9
5. 에너지 소모와 가격상승	1.0	1.2~1.4
6. 취약한 금융체계, 국유기업	0.9~1.3	0.5~1.0
7. 해외직접투자의 하락가능성	0.8~1.6	0.6~1.6
8. 대만해협과 기타 지역적 충돌	1.0~1.3	1.0~1.3

출처: * Rand(2002), ** Wolf, Yeh etc(2003)의 xx 도표를 재구성

성장률에 미치는 수준을 3개의 균열대(fault lines)와 이에 따른 3개의 단기 및 중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실업·빈곤·사회혼란, 부패, 에이즈와 전염병, 수자원 부족과 오염, 에너지 소모와 가격상승, 취약한 금융체계와 국유기업의 문제, 해외직접투자의 저하, 타이완해협과 지역충돌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몇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성장률에 2~3%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성장둔화, 고용감소, 사회문제의 확산과 같은 위기의 도미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에서도 2010년 전후를 '위기다발기'로 보고 있다.⁶⁾

중국의 병목구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에너지 확보와 세계적 시장경쟁이라는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비전통적 안보영역을 포함한 국가안보의 도전, 비정부기구의 확대와 국제테러주의 확산,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유기업의 채산성 악화, 부실채권, 직접 금융시장의 미성숙, 재정적자, 지역간 격차, 디플레이션, 위안화 자유화 등의 경제문제 등이 있다.⁷⁾ 이밖에도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한계, 인구·식량·에너지 등 자연자원

6) 이 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 금융, 경제, 취업의 영역이고 부패문제는 이러한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領導決策信息』, 2004年 35期.

7)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량채권문제는 2004년의 경우 불량채권의 손실을 국유은행이 처리하지 못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처리하여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국채의 발행

의 부족, 환경오염·수자원오염과 부족 등 환경문제, 사회적 불균형, 부패, 사스(SARS)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 사회적 기풍과 사회치안 등 사회적 문제, 과학기술의 수준의 한계·인적자원의 질 등 성장잠재력의 한계 등이 있다(郭万超, 2004: 2; Wolf, Yeh et al., 2003; 汝信·陸學藝·李培林 主編, 2004: 2; Shambaugh, 2000: 16-17). 위에서 열거되지 않는 요소로 도박, 매춘, 독성물질의 범람, 절도, 폭력, 성비불균형, 의료문제, 도시빈곤, 범죄율 상승, 집단시위, 광산 사고의 빈발, 대학졸업생 구직난, 유동인구의 자녀교육문제, 노동권의 악화, 소수 민족의 정체성 위기, 지식인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王夢奎, 2005a: 376).

이러한 병목요소들은 일시적·단계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구조적인 것도 있으며, 다른 병목요소들로부터 파생된 것도 있다. 특히 자연환경에서 초래되는 수자원 부족과 오염문제, 에이즈와 같은 요소들은 당정의 정책수단을 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일 뿐 아니라 휘발성을 띠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통화긴축의 상태에 처해 있었으나 적극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였고 사회적 불만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통해 위기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성장 과정에 묻혀있던 모순들이 분출하면서 성장을 통해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정책기조 자체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점이다. 2005년 기준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群體性)항의사건이 8만 5천건 이상 발생하는 등 균형성장이라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2)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병목

중국경제는 <표 2>와 같이 2020년까지 연간 7.8% 수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

고가 증가되었다. 더욱이 국유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와 주식회사 상장이라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도성장기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상하이 A주 지수의 2004년 수익률은 최고점을 기록한 2001년 6월에 비해 40% 하락한 -7.6%였고 국내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상하이 B주의 경우도 2001년 고점 대비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는 지표도 이런 현상을 입증해 준다.

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주로 자본축적에 근거하고 있다. 비록 자본투입이 GDP 성장에서 자본투입 지중이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영향력은 65~70%에 달한다. 요컨대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의 유형은 제도혁신과 기술개선 등에 기인한 생산성 향상과 저축율과 투자율에 기인한 투자증대 그리고 농업부분에서 공업부분으로의 노동력 배치 변화 등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유형이 멈추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도가 감소하고 농업부분에서 공업부분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지체되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기초한 투자주도형 경제로 전환했으며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어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다. 이를 좀 더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총량과잉의 모순이다. 정부가 거시조절을 통한 효과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총량과잉의 추세는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주요 소비제품 중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품은 172종으로 전체의 28.7%에 불과하며, 공급과잉 상품은 시멘트와 철강을 포함하여 428종에 71.3%에 이른다. 이러한 공급과잉의 결과 시멘트산업의 경우 수익률이 77%나 하락했으며 철강생산의 과잉도 심각한 수익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중복투자 와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인한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중국경제가 고성장과 고비용의 국면에 동시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표 2〉 2000~2020 성장률 예측(%)

연도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00~2020	2005~2020
GDP	8.7	8.1	7.5	6.8	7.8	7.5
성장						
노동력	0.5	0.4	0.2	0.0	0.3	0.2
원천						
자본	6.4	5.6	5.0	4.5	5.4	5.0
TFP ⁸⁾	1.8	2.1	2.3	2.3	2.1	2.2

출처: 王夢奎(2005a: 69)

8) 경제성장은 두 가지 요소를 포괄한다. 하나는 노동—자본—토지—에너지 또는 기타자원의 요소투입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용소의 배치와 사용을 의미하는 전요소생산성(TEP)이다. 이런 점에서 전요소생산성 지표는 요소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胡鞍鋼, 2002: 242).

2020년까지 약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GDP 1천 달러 시대에 접어든 이후 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라 비교우위는 체감되는 반면 경제성장에 따른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전체 GDP 구성에서 차지하는 노동 임금도 2003년 현재 약 49.6%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농민공들도 고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기업들은 도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 성장은 에너지 공급부족의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의 석유 가채취량은 23억 8천만 톤으로 14년 이후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020년에는 중국의 대외 석유의존도는 7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유석진·백창재 외, 2005: 58-262).⁹⁾

셋째, 소비구조의 고도화와 구조조정의 낙후성이다(유석진·백창재 외, 2005: 99). 중국에는 매년 2천여만명의 중간 수준의 소비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사치품 소비자의 비중도 총인구의 13%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까지 중등수준의 소득계층은 약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층의 소비지출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록 2005년 상반기에 소비지출이 일시적으로 성장했으나, 이 경우도 물가요소를 고려하면 실질성장은 12%에 불과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에 그친 것이다. 이것은 소비성장이 경제성장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1993~2003년 연평균 GDP성장은 15.3%였으나, 연평균 주민의 소비총량의 성장은 13.8%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각각 73%, 43%, 40%, 38%로 하락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수(外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승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의 경우 9.5%의 경제성장에서 외수가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는 여전히 '적응성 조정'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넷째, 양적 성장과 가치성장의 모순이다. 1달러당 중국의 소모자원은 미국의 4.3배, 독일과 프랑스의 7.7배, 일본의 11.5배에 달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성장 방식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의 성장

9) 중국 석유수급에 대한 자세한 시나리오는 다음을 참고할 것. <http://eia.doe.gov/emeu/cabs/china.html>.

속도는 이미 GDP증가 속도를 넘어섰으며 원자재와 GDP 증가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모탄성계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환경위기에 따른 비용손실이 매년 국내 총생산의 8~12%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⁰⁾ 또 하나의 두드러진 모순은 GDP와 GNP의 차이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비록 GDP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크지만, GDP의 절반이상은 외자의 공헌에 의한 것이다. 중국은 각종 저렴한 요소비용을 투입하여 20% 이하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80% 이상의 가치는 초국적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한편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정치개혁의 속도와 폭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그늘이 드러나면서 잠복해 있던 사회적 모순들이 분출되면서 정부권위에 대한 도전이 집단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세력화의 양상이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당내 노선투쟁의 가능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세계은행이 진단한 1980년대 위기경고의 재판이다.¹¹⁾ 그리고 공산당체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당내에서는 이른바 중국권력교체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제3대, 제4대 현상'도 논의되고 있다.¹²⁾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적인

10) 현재 각국이 채용한 유엔의 국민경제계산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ing, SNA)의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기존의 GNP 통계로는 환경오염과 생물의 다양화 등 환경이 현대 인류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할 수 없으며, 자연자원의 채취와 생태환경의 파괴와 같은 장기적 비용을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유엔은 종합환경과 경제계산 체계(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 and Economic Accounting, SEEA)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http://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F/SERIESf-61C.pdf>

11) 1980년대 세계은행은 "시장과 경쟁을 확대하는 것은 효율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진보를 가속화한다고 해도 실업, 수용할 수 없는 임금, 기업도산, 노동자의 해고, 가난하고 낙후된 주민들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중국사회를 진단했다(World Bank, 1987: 181-182).

12) 즉 봉건사회의 권력교체는 200년 전후로 이루어 졌는데 초기 50~60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이후 150년은 정체, 부패, 멸망의 시기라는 것이었다. 초기 50~60년을 '제1대, 제2대'로 보고 이후 150년을 '제3대, 제4대'로 본다면 평균 기간은 26~30년이다(劉世軍·鐵川, 2002: 4-11). 이렇게 볼 때, 현재 중국공산당도 건국과 건설이라는 제1세대와 제2세대를 거친 후 새로운 일치일란(一治一亂)의 주기율에 직면한 관건적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준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넘어 민주주의의 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체제 개혁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이후 당정분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개선, 이념적 유연화, 당내민주화의 확대, 권력계승정치의 제도화,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당정은 급격한 정치적 실험 보다는 시스템 내의 변화(change in system)를 추구하고 있다(Hu, 2000: 137). 실제로 중국당정은 '3개대표론'¹³⁾에 근거하여 자본가 입당을 공식화하면서 공산당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조치를 통해 당정이 개혁담론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이를 체제정당성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

중국이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급진적 정치개혁과 민주화가 중국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예방적·방어적 의미를 지닌다. 즉 지체된 민주화는 경제활동공간이 확대에 따른 사회 불만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미국 등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이른바 '평화적 진보(Peaceful evolution)'이라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당제 도입과 같은 체제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주의 이념의 유연한 해석, 절차적 민주주의의 도입, 인권개선 등의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하면서 '위로부터의 민주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체제는 공산당의 집정(governance)능력을 강화하거나 현장을 중시하는 민본주의(以人爲本)를 통해 체제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¹⁴⁾

이런 점에서 적어도 2007~2012년 후진타오 집권 2기까지는 계승의 위기 국면 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정상정치(normal politics)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0~2015년의 복합적 병목구간을 거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제5세대의 정치적 리더쉽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적절한

13) 중국은 2002년 16차 전당대회와 2003년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개 대표' 중요사상을 마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 이론에 이어 새로운 지도강령으로 당 강령과 헌법에 명기하였다. 즉 중국공산당은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한 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진생산력이란 사영기업주를 비롯한 부르주아계급의 입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중국공산당의 혁신과 관련되어 있다(이희욱, 2003: 461-480).

14) 이에 대해서는 Lin(2004: 266-275), 이희욱(2004)을 참조.

개량적 조치로 현재의 위기를 유예하거나 위기를 관리한 것이 실패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자유화 없는 민주화가 양립하지 못하면서 합법성의 위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정치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과도적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병목: 인식

중국내 전문가들은 <표 3>, <표 4>와 같이 삼농문제가 사회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부패문제, 법제화의 지연, 경제발전과정의 암적 요소의 등장, 도농간 격차, 당과 군중관계의 문제, 사회치안 정세의 문제, 소득차이의 확대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당정 지도부들은 소득차이와 부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차이는 사실상 농촌과 도시의 소득차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삼농문제, 실업문제, 도농간 격차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당면한 해결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도 이러한 요소는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즉 삼농문제와 실업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병목이라고 지적한 비중은 전체의 75.5%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전문가들과 당정 지도간부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정치부패, 사회치안, 사회적 기풍)와 구조적인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도시주민의 경우 <표 5>, <표 6>과 같이 지도급 간부들과는 다

<표 3> 전문가의 사회문제에 대한 판단 (단위: %)

문항	2003년	2004년	문항	2003년	2004년
1. 삼농문제의 심각성	72.5	49.0	7. 사회치안정세의 불량	0	1.0
2. 부패문제의 지속적인 돌출	19.3	35.6	8. 소득격차의 상황지속	0.9	1.0
3. 법치건설의 진행 지연	1.8	2.9	9. 사회도덕수준의 문란	-	-
4. 경제발전중의 환부돌출	3.7	-	10. 사회보장체제의 불비	0	-
5. 도농격차의 확대	1.8	5.8	11. 국유기업개혁의 지연	0	-
6. 이상적이지 못한 黨群관계	0	2.9	12. 경기과열에 대한 이해부족	1.9	-

출처: 汝信·陸學藝·李培林 主編(2004: 24)

〈표 4〉 지도급 간부의 사회문제에 대한 판단

구분	제1	제2	제3	제4	4항으로 제한한 경우	
					2003년	2004년
1. 사회치안	24.3	5.6	3.7	4.7	32.0	38.3
2. 물가	4.7	0.9	n.a	2.8	1.8	8.4
3. 소득차이	43.9	24.3	4.7	2.8	42.3	75.7
4. 농민부담	4.7	15.0	8.4	7.5	37.9	35.6
5. 실업	3.7	14.0	14.0	3.7	58.7	35.4
6. 사회기풍	1.9	14.0	12.1	9.3	28.4	37.3
7. 부패	8.4	9.3	27.1	14.0	50.9	58.8
8. 빈곤	0.9	2.8	6.5	3.7	19.8	13.9
9. 국유기업	3.7	6.5	12.1	10.3	25.1	32.6
10. 지역발전의 차이	2.8	7.5	6.5	25.2	42.2	42.0
11. 자연재해	0.9	n.a	0.9	0.9	1.8	2.7
12. 퇴직인원에 임금	n.a	n.a	0.9	n.a	2.6	0.9
13. 법률평형상	n.a	n.a	n.a	0.9	1.7	0.9
14. 중대사고	n.a	n.a	0.9	6.5	10.4	7.4
15. 토지분쟁	n.a	n.a	0.9	4.7	n.a	5.6
16. 기타	n.a	n.a	0.9	2.8	15.5	3.7

주: 순서는 4항으로 제한했을 경우 중요성에 따라 배치함 것임

출처: 汝信·陸學藝·李培林 主編(2004: 37)

〈표 5〉 중국이 해결해야할 당면 사회문제(단위: %)

구분	제1위	제2위	제3위	제4위	네 문항 합계
1. 빈곤문제	20.6	3.7	2.8	n.a	27.1
2. 지역발전격차	17.8	12.1	8.4	3.7	42.0
3. 주민소득차이	16.8	20.6	5.6	5.6	48.6
4. 부패	14.0	13.1	18.7	9.3	55.1
5. 삼농문제	8.1	8.4	6.5	20.6	43.9
6. 농민부담문제	7.5	3.7	3.7	1.9	17.8
7. 국유기업문제	6.5	12.1	12.1	5.6	36.3
8. 실업문제	4.7	10.3	9.3	6.5	30.8
9. 사회치안문제	1.9	4.7	9.3	15.9	31.8
10. 사회기풍문제	1.9	3.7	16.8	10.3	32.7

주: 汝信·陸學藝·李培林 主編(2004: 49)에서 중요도에 따라 재구성

〈표 6〉 1999~2004년 도시민의 국내 사회문제에 대한 평가

순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실업, 사강	환경문제	사강, 취업	사강, 취업	사강, 취업	사강, 취업
2	청렴건설	실업, 사강	환경문제	사회보장	사회보장	경제발전수준
3	경제성장	자녀교육	사회보장	환경문제	주택개혁	주택개혁
4	환경문제	사회치안	경제성장	의료제도개혁	환경문제	사회보장
5	사회치안	청렴건설	주택개혁	경제성장	경제성장	환경보호
6	취업문제	경제성장	청렴건설	주택개혁	의료제도개혁	청소년교육문제
7	인구문제	양로문제	사회치안	청소년교육문제	청렴건설	범죄와 사회치안

출처: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 10개 도시 설문조사 결과를 汝信·陸學藝·李培林 主編(2004: 64)에서 재구성.

소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사강(lay-off)과 취업문제, 급속한 노동계약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형성된 사회보장(주택, 의료, 양로)의 위기 등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민의 이런 경향에 미루어 볼 때 농촌주민의 경우는 농업생산성의 저하, 농민유동의 문제, 도농간 차이, 빈곤과 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휘발성이 큰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뚜렷한 단선적 해결방안도 없다는 점에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요인들과 사회적 위기요인들은 〈표 7〉과 같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 위기국면에 놓여있다. 병목현상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 발생할 경우 중국정부가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호연관되어 있는 병목요소들이 동시에 드러날 경우에는 중국사회의 존재방식 자체를 현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4. 사회적 병목: 핵심변수

중국의 사회적 비용의 도시와 농촌문제이다. 농촌의 경우 삼농문제의 축으로

〈표 7〉 정치경제적 병목구간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경제성장*	연8.7%	연 8.1%	2010~2015년 7.5%		2005~2020년 7.5%
			2015~2020년 6.8%		
도시화률(%/만명)	42(5억 5천)	47(6억 4천)	52(7억 2천)	57(8억 1천)	도시탄성계수 1.0
노동력과 실업		2013~16년 (노동력공급과잉 고조기)		노동인구 23%, 노동인구 9억 4천만	노동쟁의 급증 실질실업 8% 이상 (전인구의 65%)
농업잉여노동력		연평균 2000만명의 이동 2010년 중산계급 2억명 (총인구대비15%) 약세집단 3억(장애+실업+절대빈곤 등)			노동력이전한계 도시부족 토지보상
도시규모		2015년 2백만 도시*230개 소요			재원확보문제
정치일정	11차 5개년계획 2008년올림픽	11차 5개년계획종료, 상해엑스포 제5세대지도부등장 2012~2013			정치리더십 문제
에너지와 수자원		에너지 위기고조(2013~15) 물부족, 환경오염			농지감소 환경파괴
질병		AIDS 환자 1천만명** SARS와 조류독감 등		에이즈 환자 연간 20~30% 증가 2천만명	

주 1: 경제성장률 예측은 王夢奎(2005a)

주 2: 2003년 현재 AIDS 환자는 약 84만명이나 에이즈 확산의 임계점에 와 있다. 효과적조치가 없을 경우 2010년 1천만명으로 예상됨(連玉明, 2005: 1).

등장하였고 도시의 경우 고실업의 위험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농간 실업의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후진 타오 체제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과제를 정책우선 순위에 배치하였다면, 이것은 〈표 8〉과 같은 농촌문제의 심각성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주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 삼농문제

일반적으로 중국의 ‘농촌’ 문제를 농업, 농민, 농촌문제로 묶어 삼농문제라고

〈표 8〉 중국발전의 주요대가와 비용

유형	내용	GDP 대비비율(%)	계산연도
생태비용	자연재해가 가져온 경제손실	3~5	1990~2000
자연자산손실	에너지소모, 광산자원고갈, 삼림소모,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제손실	5~7	2000~2002
실업비용	도시고실업의 경제손실 농촌농업노동력 유희화가 남긴 산출기회자본	7~8 20~33	1999~2000 1996~2002
사회비용	범죄, 노동쟁의, 집단쟁의, 법률소송이 남긴 경제손실 지적재산권 소비자 권리침해 등이 가져온 손실	7.2 2~3	1998~2002 2000
부패비용	부패, 독점 등 국민복지에 영향을 준 요소들의 경제손실	13~17	1995~1998/ 1999

출처: 胡鞍綱·王亞軍(2004: 7-11).

부른다. 농업문제의 경우는 식량의 수급문제, 농업생산성과 농업현대화, 생태환경의 파괴 등과 관련되어 있다. 식량수급의 경우 2004년 현재 약 9,700억 톤으로 매년 0.8%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콩과 일부 소맥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다(馬洪·王夢奎, 2005: 243). 따라서 농업생산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식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외화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식량문제 자체가 당면한 위기로 작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현재 농업생산성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요소는 과잉노동력의 문제이다. 개혁개방 이후 이미 1억 2천 만명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농촌을 떠났다(*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2, 2003). 현재 농촌에는 약 4억 9천만 명의 노동력 중에서 약 1억 8천만 명은 향진기업이나 외지에서 비농업생산에 취업하였다. 이렇게 보면 2003년 기준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3억 1천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생산성에 비추어 볼 때, 약 1억 5천만 명에서 1억 8천만 명 정도가 적절한 농업노동력이며, 1억 2천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의 정도는 과잉 농업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농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노동력의 배출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농업생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경우, 19억 무(畝)의 토지에서 4억 7천만 톤의 식량을

수확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은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수준으로 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도 2003년 기준으로 49.1%의 농업노동력이 GDP의 14.6%를 공급하는 데 그치는 등 농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4.8배나 떨어지고 있다.

농촌문제의 경우, 향진(鄉鎮)기업 현대화의 실현가능성, 지방정부와의 유착, 부진한 내륙과급효과 등이 구조적 변수와 함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열악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포괄한다. 농촌에서는 자본공급의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구조조정이나 농촌의 비농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금융지원이 시급하지만, 농촌금융체계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다. 특히 농촌금융기관의 자본부족, 서비스체계의 불안정, 농촌신용자금의 공급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농촌에서는 주로 농촌신용사를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25%의 농가만이 농촌신용사로부터 대출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촌에서는 약 2천만 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농민의 1/3 이상이 넘는 3억 2천만 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문제의 경우 즉 농가소득 향상의 어려움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삶의 질의 하락문제이다. 더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농산품가격이 국제가격 보다 높은 상황에서 농산품가격을 대폭 높여 농민소득을 높이는 방식의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농민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는 과중한 부담금 징수문제이다. 이것은 토지수용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농민시위의 주요한 이슈였다. 이 밖에도 농업의 과잉노동력을 안정적으로 도시로 진출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촌생활 개선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특히 농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온 의료와 교육, 보험의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한편 농촌 저소득층과 빈곤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농촌의 저소득인구는 5,617만 명으로 농촌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다(北京國際城市發展研究院, 2005b: 1177). 그리고 2003년 기준 농촌의 절대빈곤인구는 전년대비 80만 명이 늘어난 2,900만 명으로 빈곤발생률은 3.1%에 달한다. 이처럼 농민소득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빈민인구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산업전략을 통해서서는 이를 단기간

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고민은 2006년 3월 개최된 전인대 10기 4차 회의에서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핵심적으로 의제로 설정했으나, 전체 예산의 9.6%에 달하는 총 3379억 위안의 농업예산은 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농촌근대화와 농민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사회불안을 무마하는 미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결국 호구제도의 재편과 농민의 질서있는 도시이동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남겨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삼농문제의 '농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 있을 것이고 중국사회의 안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 실업과 취업문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약 9.4%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취업 증가속도는 매우 완만했으며 심지어 감소되기도 했다. 2005년 경우 2000년 대비 1,200만 명의 신규노동인구가 증가했으며, 이중 900만 명이 취업대기자가 형성되었다. 개혁개방 초기 취업탄성계수는 0.32였으나 1990년대에 0.1%를 기록한 이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GDP는 1990~2000년 10.1%의 증가했으나, 취업증가율은 1.1%로 그치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GDP가 1% 증가할 때, 약 3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약 80만~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張東偉·蔡昉, 2004: 62-68). 따라서 실업과 고용사정의 악화는 소득차이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체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범죄율 증가와 함께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다. 더구나 중국의 고용사정과 실업문제는 중단기적으로 노동력 공급구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발전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1차산업의 경우 과잉고용, 2차산업의 경우 과소고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해결책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노동력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표 9>와 같이 노동연령인구는 매년 1천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1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15~59세를 노동연령인구로 계산한 경우는 2013년을 기점으로

〈표 9〉 중국인구연령구조(2005~2040) (단위: %)

연도	0~14세	15~64세	노동력인구	노인부양인구a	노인부양인구b	부양인구a	부양인구b
2005	22.40	69.97	62.55	7.63	15.09	29.96	37.45
2010	20.74	71.08	62.40	8.18	16.90	28.85	37.60
2015	19.75	70.90	61.49	9.35	18.81	29.03	38.51
2020	19.30	69.26	59.60	11.44	21.15	30.68	40.40
2030	17.57	67.09	54.72	15.34	27.76	32.84	45.28
2040	16.51	63.43	53.43	20.05	30.10	36.49	46.57

* 노인부양인구 a는 65세 이상, b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부양인구 a는 0~14세와 65세 인구의 합, b는 0~14세와 남자 60세 여자 55세의 합

출처: 胡鞍綱·王亞華(2005: 82)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2013~2016년까지는 노동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2010년 이후 노동연령인구의 규모는 완만하게 하락하지만,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노동연령인구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둘째, 도시화 과정에서 매년 수많은 젊은 농촌인구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미숙련 노동력의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어 중급과 고급노동력 시장의 동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경쟁이 가속화되고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시장메커니즘의 발전에 따라 노동력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업과 관련된 지표는 〈표 10〉과 같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의 신규취업 규모는 980만 명이고 510만 명의 야강노동자들이 재취업하여 도시의 등기실업률은 4.2%를 기록했다. 이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통계를 통해 실질실업률을 재구성할 경우 여전히 약 7~8%(심지어 22.9%로 추정하는 경우)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2005: 65).

중국의 취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1980년에서 1999년까지 전국적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취업인원은 2억 9천만 명으로 세계 신규 노동력의 33.7%를 차지했다. 특히 1998년부터는 베이비 붐

〈표 10〉 도시주민 등기실업률과 실질실업률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등기실업자수(만명)	595	681	770	800	827
등기실업률(%)	3.1	3.6	4.0	4.3	4.2
실질실업률(%)*	8.3	8.5	8.6	n.a	n.a

출처: 각 년도 중국통계연감. *의 경우 아시아개발은행의 통계

세대의 취업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들어섰다(中共中央宣傳部理論局, 2005: 62-63).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인구의 자연증가로 상쇄되고 있다. 취업구조의 악화는 작업조건의 악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른바 4초(四超) 현상인 초강도, 초부하, 초체력, 초노동 시간으로 인해 피로에 의한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삼자기업과 사영기업 중에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주당 72시간(주 6일*12시간)에 달하고 있다(孫立平, 2004: 43).

이처럼 현재의 실업문제는 인구구조에서 비롯되는 공급과잉현상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실업자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아 중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Cai, 2001).

3) 사회적 불평등

중국의 불평등 현상은 연해와 내륙간의 지역적 불평등, 도시와 농촌의 차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 소득차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시나리오는 첫째, 2차 산업이 먼저 확대되고 이후 3차 산업이 순조롭게 확대되는 표준 시나리오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정부투자가 내륙에 집중되면서 소득격차가 부분적으로 해소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이다. 셋째, 연해지역과 도시의 거품이 빠지면서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정치적 대혼란이 일어나는 비관적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보면 표준시나리오가 등장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까지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체되면서 다양한 우회로를 거칠 가능성이 보다 크다. 왜냐

하면 1993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은 소득증가와 동반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경제성장이 소득의 양극화를 동반하는 제로섬 게임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중국이 사회적 불안정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빈부차이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중국의 경우 2002년 0.43을 기록하는 등 중간수준의 불평등 정도를 넘어선 0.458~0.52(1990년대 미국보다 높은 수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표 11>과 같이 1980년 초(0.28)→1995년 0.38→1999년 0.457→2000년 0.458→2001년 0.459→2004년 0.465에 이르고 있다(門洪華, 2005: 54). 아시아개발은행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지니계수가 0.3~0.4의 정상(normal)이 아니라 이미 0.5의 경계상태(warm)를 넘어 사회적 동란이 발생할 수 있는 0.6의 고도로 불평등한 위험상태(danger)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ADB, 2002).

이러한 소득차이의 확대는 소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점유에서도 나타난다. 2002년 기준 전국적으로 상위 소득 1%집단이 전사회 총소득의 6.1%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1995년 대비 0.5% 높아졌다. 상위 5% 집단은 총수입의 약 20%를 점유하여 1995년 대비 1.1% 높아졌고, 상위 10% 집단의 경우 총소득의 32%로 1995년 대비 1.2% 높아졌다. 또한 전인구 6%가 전체 금융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5단계 소득지표로 분류할 경우에도 최상층 20%가 소득의 40%, 총예금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추이는 매년 3.1%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상위 10%계층과 하위 10%계층의 소득차이는 2004년 기준 9.5: 1로 확대되었다(《新京報》2004. 12. 24).

국가노동부와 사회보장부 임금연구소 예측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중국의 도시주

<표 11> 지니계수

구분	1978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농촌주민지니계수	0.21	0.31	0.34	0.35	0.37
도시주민지니계수	0.19	0.23	0.28	0.31	0.35
전체주민지니계수	0.30	0.343	0.389~0.42*	0.417	0.465~0.6**

주 1: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1981년 0.29, 1995년 0.42를 기록함

주 2: 사회학자 리창(李强)의 분석에 의하면 2004년 0.5 수준. 일부학자들은 0.6 주장.

출처: 『中國統計年鑑』 등 통계자료 등의 종합

민의 소득이 성장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예상과 달리 저소득층의 빈곤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차이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외자,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내부기업과 인재쟁탈전이 가열되고 고급 노동력을 지닌 사람의 소득이 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한편 농촌노동력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어 노동력 공급우위현상을 유지시키는 한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빈부차이와 함께 빈곤인구의 형성도 확대되고 있다. 2002년 기준 5천명(빈민+장애인+실업자 등)으로 추산했으나, 1인당 연평균 882위안(전국 평균 1인당 농민소득의 1/3) 이하는 8,517만 명이고, 유엔 기준인 900위안을 적용할 경우 1억 명을 상회한다. 이는 총 노동인구의 10%에 달하는 규모이다(<http://gov.people.com.cn> 검색일: 2005년 10월 17일). 심지어 빈곤선 기준을 실제 생활과 연계하여 현실화할 경우 약 2억 1천만 명의 빈곤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보고도 나타나고 있다.

도농간 소득차이는 1997년~2003년 7년간 전국적으로 농민1인당 소득은 695.9 위안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것은 도시주민 소득증가의 1/5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도 도시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1.8: 1, 1990년대 중후반 2.5: 1인 도농간 소득차이가 2003년에는 3.53: 1로 확대되었다(吳光炳, 2004: 57-61). 더구나 도시주민의 경우 주택과 사회보장, 공공위생과 교육 등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 반면 농촌의 경우 각종 세금과 농업 생산수단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그 격차는 5: 1에서 6: 1로 확대된다(王夢奎, 2005b: 117). 문제는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규모가 지나치게 많고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농민소득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농민수입구성을 보더라도 비농업에서 얻는 비중이 50%에 달하고 임금성 수입이 1/3 수준으로 임금성 수입이 전체 농민소득 증가에 미친 영향은 약 80%에 달할 정도로 농업에서 소득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간 불평등의 경우 동부지역의 총생산은 <표 12>와 같이 전체 GDP의 약 58.5%, 서부지역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기준 동부지역의 1인당 GDP는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비해 각각 2.6배와 2.1배나 높으며, 연해지역 내

〈표 12〉 총생산 대비 동·중·서부 지역의 생산비중(%)

구분	1978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2년	2003년
동부	50.6	50.2	51.5	57.3	57.9	58.5
중부	29.3	29.8	28.3	25.6	25.1	24.6
서부	20.1	20.0	20.2	17.1	17.0	16.9

출처: 각 연도 『中國統計年鑑』 종합

부에서도 남부와 북부지역의 차이는 약 1.3배의 격차가 있다. 1인당 GDP도 1980~2002년의 경우 서부와 동부는 1:1.92에서 1:2.59로 확대되었고 중부와 동부도 1:1.53에서 1:2.03으로 확대된 반면 서부와 중부는 1:1.25에서 1:1.27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발달한 상하이와 가장 낙후된 꾸이저우성을 비교하면 약 13배의 차이가 나타난다.¹⁵⁾ 일반적으로 1인당 GNI(환율을 환산한 1인당 GDP)와 지니계수의 상관성을 보면 1인당 GDP가 5천 달러에 이르면 지니계수가 0.4를 하회하는 상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2020년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할 때 GDP는 여전히 3,500달러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지역격차가 커지고 좁혀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역격차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문제는 이러한 지역간 불평등은 GDP 뿐 아니라, 사회발전, 특히 교육과 위생과 문화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수준과 정보획득의 차이는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능가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문지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인류발전지표에 따르면 가장 지수가 높은 곳은 상하이, 베이징, 톈진으로 모두 동부 연해지역에 속해 있고, 지수가 가장 낮은 티벳, 꾸이저우성, 칭하이성은 모두 서부에 편재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불평등의 결과 사회적 불만이 조직화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불만을 느끼고 있는 주민의 규모는 약 1~2억 명으로 전체 도시총인구의

15) 그러나 유동인구가 해당지역의 1인당 GDP에 기여한 것을 보면 2000년 기준 상해는 약 18.5%, 북경은 약 17.7% 광둥은 약 16.3% 감소되는 반면 사천은 8.3%, 강서는 9.1% 안휘는 7% 상승했다. 이것은 유동인구의 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지역격차가 보다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이에 대한 자세한 상관관계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경험연구와 연구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馬洪·王夢奎(2005: 95-106).

22~45% 수준이며, 매우 불만을 느끼는 규모도 3,200만 명~3,600만 명으로 도시 총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다(胡鞍鋼, 2004: 87). 특히 도시노동자들의 체제에 대한 신념의 위기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비공식 노동자와 반실업상태의 노동자들은 자주노조를 결성하면서 조합주의에 포섭된 관변 노동조합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 자신의 국가에 대해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농촌문제도 농민의 분담금의 과도한 징수 차원을 넘어 일할 권리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면서 직접적인 농민 시위 등 이른바 집단항의(群體性)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당정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이나 균형성장,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5. 위기관리의 거시적 구상

중국이 사회적 병목을 극복하기 위한 거시적 관리구상은 <표 13>과 같은 국가 전략의 시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기 전략은 2010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라는 국제적 행사가 있고 중국공산당 17차 전당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2기 후진타오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이 시기 사회경제 발전전략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 종료되는 11차 5개년 계획에 담겨있다.¹⁷⁾ 그리고 창당 100주년(2021)이 되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목표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장기 전략은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경에 현대화된 중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 과제는 중단기적 성과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경로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중장

17) 1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plan) 대신 규획(regul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물론 이것은 16차 대회 이후 각종 문건에서 규획이 계획의 개념을 대체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의미는 정부가 자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점, 지나치게 구체적인 양적지표를 약화시키고 정부가 경제사회발전에서 거시적 파악과 조절을 중시하겠다는 점, 정부기능을 전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計劃變規劃一字之差透出三大信號” www.xinhuanews.com (검색일: 2005년 10월 10일)

〈표 13〉 중국 국가전략의 시기적 구분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신전략)	2020년	2050년
3단계전략	1단계(一步走)		2단계 (二步走)	소1단계	소2단계	소3단계
3단계(三步走)						
1인당 GDP(달러)	100	200(×2)	800(×4)	1600*	3200(×4)	12800(×4)
특징	기준시점	온포문제 해결	소강수준달성	소강과 전면소강의 과도단계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	비교적 부유, 현대화달성
비고	1987년 온포단계 달성선언		15기 5중전회에서 선언	신3단계론에서 채설정 (11차 5개년계획)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 2005년 기준 중국은 1,700달러에 달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에 1인당 GDP 3천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출처: 이회옥(2005: 10)

기적 전략목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 11차 5개년계획의 성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2020년과 2050년의 국가건설 모형의 적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며, 후진타오 체제의 평가(1997~2008)와 향후 출범할 제5세대의 정치안정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⁸⁾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일단 중국위협론이라는 중국딜레마(chinese dilemma)를 불식시키고 국내안정을 위해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를 핵심으로 하고 경제주의(economism)를 주요임무로 하며, 지역우선(regional primacy)을 중점으로 하고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상호협력주의와 가능한 미래에 구체적인 상을 그리는 것이 국가전략의 목표가 될 것이다(胡鞍鋼·門洪華, 2005: 88-90).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거시적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경제전략이다. 중

18) 그러나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의 목표에 의하면 2010년 1인당 GDP를 두배로 늘리는 것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05년에 이미 1,700달러에 달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 3천 달러에 이른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7%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데 2006년 목표로 제시한 것은 8%이다.

국은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구화 과정에 참여하여 우선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주도역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중국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체제의 개편, 해외시장의 확대, 해외기술과 자본 확보의 통로마련, 전략적 자원의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안보전략이다. 중국은 다자안보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안보체계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변외교를 강화하고 대만과의 통일을 실현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정한 군비를 확보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줄이는 한편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¹⁹⁾ 셋째, 문화전략이다. 문화는 연성권력의 일종이며 향후 종합국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江澤民, 2002: 38). 이를 위해 '위대한 중화의 복원'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이 서양을 압도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를 높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넷째, 환경과 생태안보전략이다. 이를 위해 그린 GDP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통적 공해산업을 환경산업으로 변화시키며 생태개발(ecological exploitation)에서 생태건설로 그 중점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미 후진타오 경제운용정책의 철학적 기초인 '과학적 발전관'에도 에너지 절약형 사회, 환경친화적 사회를 목표로 하는 성장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人民日報》, 2004. 2. 17).

이러한 거시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의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장목표이다. 경제총량은 2001~2020년까지 GDP 성

19)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위협론의 견제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위협론의 논리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이러한 경제능력이 군사능력으로 전화되며 미국과의 마찰을 격화시켜 안보경쟁은 불가피해진다. 어떤 국가도 지역 내의 맹주를 희망하며 다른 국가들이 그 후원(後園)을 침입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멘로독트린의 실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중국을 평가하고 있는 이론가의 한사람인 John Mearsheimer의 견해 참조. <http://globetrotter.berkeley.edu/people2/Mearsheimer/mearsheimer-conversation.htm>

〈표 14〉 2020년 중국대전략의 지표

목표	구체지표
성장목표	GDP 7.2%, 세계2위 무역대국
강국목표	종합국력 미국과의 격차 1.5배~2배 이내로 축소*
부민목표	2020년 빈곤인구 절반이하로 감소, 고등학교와 대학보급율 2010년에 70%와 20% 이상, 2020년에 85%와 40%로 확대, 에이즈와 전염병 발병률감소, 아동사망률 2/3로 감소, 농촌 사회보장체계의 초보적 건립
국가안전목표	국토통일, 하이테크 방어작전능력 제고, 군현대화, 고기술 인민전쟁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2010년 인구자연증가율 5% 이내로 축소(2020년 0% 성장), 2010년 삼림피복률 20%(2020년 23.4%), 토지유실면적 5000만 km ² 관리, 2010년 주요오염배출량 10~15% 감소, 도시 우수집중처리율 60% 이상, 응급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국제경제력목표	국제경쟁력 증강, 현재 30~30위권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
화해안정목표	도시 실업보험과 기본양로보험 85% 확보, 농촌사회의료보험 75% 확보, 노동쟁의 5% 이내로 통제, 형사사건 발생률 0.6%, 치안사건발생률 0.8%로 통제

출처: 胡鞍鋼·門洪華(2005: 67-68), 胡鞍鋼·王亞華(2005: 176-177)를 재구성

장률을 7.2% 유지한다는 것이다.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0년 GDP는 2000년의 4배에 달한다. 이것은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하여 30배에 달하는 규모로 GDP 총량으로 보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실체가 되는 규모이다. 무역증가의 폭은 경제성장의 속도를 증가하고 있는 데 현재 6대 무역국에서 2020년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세계무역의 10%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종합국력의 목표이다. 향후 20년 동안 미국과의 격차를 현재의 2.3 배에서 1.5배~2배로 줄이면서 종합국력에서 주도능력을 지닌 세계강국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민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부민(富民)목표이다. 1인당 평균 교육연수와 기대수명을 현재의 중상위의 발전수준(2002년 0.745)에서 비교적 발달한 국가의 수준(0.8)로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빈곤 인구를 감소시키고 교육보급률을 대폭적으로 높여 인문발전에서도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넷째, 국가안보 목표이다. 적극적으로 다자협력 모델을 지지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대만과의 통일을 실현하며 주변국가와의 영토와 영해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의 현대화, 기계화, 정보화를 가속하고자 한다.²⁰⁾

다섯째, 국제경쟁력을 현재의 세계 30위권에서 10위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특히 금융, 기초설비, 과학기술, 교육 등의 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섯째, 환경과 경제발전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이다. 인구성장을 억제하고 삼림과 초지를 보호하며 도시와 농촌의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일곱째, 조화(和諧)안정의 목표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계층간, 지역간 차이와 불균형을 바로잡는 한편 복지의 위기를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며 각종 노동조합과 노동중재위원회를 통해 노동쟁의를 줄이는 한편 형사사건과 치안사건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구상이다.

이러한 전략구상에 출발하여 11차 5개년계획에서는 단기적인 발전목표를 제기하였다(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年計劃的建議編輯組, 2005: 7-8). 즉, “2010년 1인당 GDP를 2000년 대비 2배로 늘린다.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단위 GDP 에너지소모를 2005년 대비(10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연도) 20% 이상 줄이며 생태환경이 악화되는 추세를 억제하고 경지가 과다하게 감소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유명상표,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형성시킨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비교적 건전화하고 개방형 경제를 새로운 수준까지 발전시켜 국제수지를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한다.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공고화시키며, 도시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사회보장체제를 완전화하며 빈곤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 도농간 주민소득 수준과 생활의 질을 보편적으로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거주·교통·교육·문화·위생과 환경 등의 조건을 비교적 크게 개선한다. 민주법제건설과 정신문명건설을 새롭게 전개시키고 사회치안과 안정생산환경을 호전시키며 조화사회 구축에 새로운 발전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전략을 통해 달성한 2020년의 중국사회가 양적인 경제성장

20) 중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에 대해서는 胡鞍鋼·門洪華(2005)을 참고.

〈표 15〉 21세기 전반 50년 선진국과 중국의 현대화(일부) 지표 비교표

구분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R&D 경비/GNP(%)	2.3	1.0	2.5	1.5	2.8	2.0	3.1	2.4	3.4	3.0	3.8	3.6
과학기술자수/만명	33	5.5	36	8	40	12	44	18	49	26	54	39
특허/백만명	790	20	873	52	964	112	1,065	201	1,176	359	1,299	643
중등보급율(%)	100	63	100	77	100	85	100	89	100	94	100	99
대학보급율(%)	60	7.2	66	15	73	24	81	34	89	48	99	68
T.V 수/천명	641	293	708	434	782	583	864	644	954	711	1054	786
인터넷가구수/백만명	2,988	178	6,000	1,000	7,000	2,000	8,000	3,000	8,500	5,000	9,000	8,000
도시인구비(%)	79	36	81	44	84	53	86	61	87	71	89	81
의사수/천명	3	1.7	4	2.1	4	2.5	5	2.9	5	3.4	6	3.9
영아생존률(%)	99.4	96.8	99.6	97.2	99.6	97.8	99.7	98.3	99.7	98.8	99.7	99.1
평균수명(세)	78	70	80	72	83	74	84	77	86	79	88	81
1인당 석유에너지 소비(천g)	5448	868	5900	1285	6264	1902	6584	2556	6784	3335	7131	4616
1인당 GNP	27,680	840	37,200	1,435	45,346	2,451	50,090	3,992	55,331	6,503	61,120	10,593
1인당 PPP	27,770	3,920	37,321	7,020	45,494	11,434	50,253	15,368	55,511	20,653	61,318	27,756
2차산업증가치(%)	32	67	29	55	26	45	24	37	21	30	19	24
2차산업노동력비중(%)	30	73	27	60	25	49	22	40	20	33	18	27

주: 1인당 GNP, 1인당 PPP는 2000년 기준 달러환율로 환산

출처: 『中國現代化報告』(2003: 99-107)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에 걸 맞는 질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표 15〉와 같이 의문이다. 정상적인 목표를 달성한 2020년의 중국의 모습이 선진국의 삶의 질이나 성장의 결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낙후된 현대화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다시 험난한 현대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다.

6. 결론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발

전의 문제가 아니라, 공업화·지식·시장·전지구화·민주화·문명의 전환이라는 다층전환기에 중국의 생존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한 평가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중국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성과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부상은 이미 하나의 현실이 되었으며, 중국이 정한 국가전략의 시간표상의 지표들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키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정적 불안(stable unrest)이라고도 할 수 있다(Shambaugh, 2000).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국비관론도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효율적으로 지속성장의 병목구간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이다. 즉 중국이 거품경제로 전환하여 저수입국가로 남게 될 것이며 시장에서의 역할도 체감될 것이다, 부진한 개혁과 불평등이 악성순환구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빈곤해소 노력에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농촌지역의 극도의 빈곤이 가중될 것이고 도시빈곤도 빈곤이 출현할 것이다. 도농간·지역간·계층간 차이가 확대되어 낙후된 성에서는 빈곤퇴치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빈곤층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는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외자도 감소하고 무역마찰도 증가할 것이다(世界銀行 1997: 98).

또 하나는 성공의 역설이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중국(Chaotic China)의 가능성이 다(Swain and Tellis 2003: 182-229).²¹⁾ 그 동안 중국이 각종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 위기를 유예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구조적'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중국의 국가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이 조화롭게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정치 좌경 경제 우경'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한적 당내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성장을 통해 확대된 사회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특히 효율을 중시하고 시장에 기초한 사회개혁 과정에서 체제안전판이었던 단위체제(work unit system)가 대부분 해체되면서 이를 통해 당정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주민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가능케

21) 중국의 국가전략과 미래에 대한 외부평가에 대한 중국 측의 재평가는 張建華 主編(2003: 3-19)와 上海福 經濟豫測研究所(2004: 14-22)를 참고.

했던 시스템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여기에 인터넷공간의 확대에 의한 정보유통의 확대는 단일한 국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기로 접어들 경우 각종 사회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개혁의 속도와 폭 향후 중국사회주의 존재방식을 놓고 권력내부에서도 노선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²⁾

이러한 위기의 두 차원은 모두 향후 10년간의 위기관리가 중장기적 중국체제 안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국가적 이벤트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체제의 자신감을 강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강대국화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재정투자에 의존한 중국경제의 성장방식이 올림픽을 전후로 피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포스트 올림픽' 시기에는 그동안 억제되었던 다양한 병목들이 거품경제의 표면위로 착종되면서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을 통해 배출된 도시실업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운동과 농촌의 토지수용을 둘러싼 크고 작은 집단항의시위는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국의 체제병목현상이 곧바로 중국체제의 폭발이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위험과 기회의 십자로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병목이 시기적으로 누적되어왔던 구조적이라는 점과 병목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전하고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제가 2012년 이후 등장할 제5세대 지도부에 부여되고 있다. 건국이전에 출생한 세대가 퇴장하면서 이들의 권력우산이 취약한 가운데 '안정중시론'과 '민주주의 확대'를 둘러싼 잠복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주의 존재방식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22) 현재 중국의 경우 성장파와 민족파 사이의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주류지체제의 이론적 세례를 받은 성장파들이 여전히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전례 없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중국 국무원 산하 산업정책연구소의 책임자와의 비공개 세미나(北京 2005. 8. 17).

참고문헌

- 유석진·백창재 외(2005), 《중국의 지속성장은 가능한가: 대내외제약과 중국의 대응》 (미출간).
- 이희옥(2004), “3개대표론과 중국사회주의의 변화”, 《중국학연구》.
- 이희옥(2005), “중국의 국가전략: 신형공업화와 도시화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봄호.
- 정재호(2006),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서울: 길.
- 江西元·夏立平(2004), 《中國和平崛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江澤民(2002),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北京: 人民出版社.
- 康平(2005), 《中國國家發展戰略》, 北京: 紅旗出版社.
- 郭万超(2004), 《中國崛起: 一個東方大國的成長之道》,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 鯨島敬治(2000), 《2020年の中國》, 東京: 日本經濟研究所.
- 仇保興(2004), 《中國城鎮化: 機遇與挑戰》,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國家統計局 編(2004), 《2004 中國統計摘要》,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國家統計局城市社會經濟調查總隊(2005), 《2004 中國城市統計摘要》,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門洪華(2005), 《中國: 大國崛起》,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北京國際城市發展研究院(2005a), 《中國城市十一五核心問題研究報告(上)》,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 北京國際城市發展研究院(2005b), 《中國城市十一五核心問題研究報告(下)》,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 馬洪, 王夢奎(2005), 《中國發展報告(2005)》,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 白津夫(2005), “十一五期間我國經濟增長中的主要矛盾”, 《經濟參考報》, 10月 18日.
- 上海福 經濟豫測研究所(2004)《中國究竟在 里?》, 上海: 學林出版社.
- 孫立平(2004), 《斷裂: 20世紀 90年代以來的新中國社會》,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汝信·陸學藝·李培林 主編(2003), 《2004年: 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汝信·陸學藝·李培林 主編(2004), 《2005年: 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連玉明(2005), 《中國城市年度報告 2005》,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 連玉明(2004a), 《中國城市報告》,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 連玉明(2004b), 《中國資政報告》,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 葉自成(2003), 《中國大戰略》,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夢奎(2005a), 《中國中長期發展的重要問題 2006~2020》,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 王夢奎(2005b), 《中國的全面協調可建持續發展》, 北京: 人民出版社.
- 劉世軍·鐵川(2002), 《江澤民“三個代表”思想研究》南京: 南京大學出版社.
- 魏禮群 主編(1996), 《1996~2010中國社會全面發展戰略研究報告》,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 陸學藝 主編(2004), 《中國農村現代化基本問題》,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張建華 主編(2003), 《十六大之后關注中國面臨的緊要問題》, 北京: 經濟日報出版社.
- 日本經濟新聞社 編(2002), 《中國: 世界の工場から市場へ》,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張幼文·黃仁偉(2004), 《2004中國國際地位報告》, 北京: 人民出版社.
- 張東偉(2004), “擴大與促進就業的思路與對策”, 陳佳貴·王延中 主編, 《中國社會保障報告(2001~2004)》,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張東偉·蔡昉(2002), “就業彈性變化趨勢研究”, 《中國工業經濟》, 5期.
- 中國現代化戰略研究課題組(2003), 《中國現代化報告 2003》,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中國現代化戰略研究課題組(2004), 《中國現代化報告 2004》,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年計劃的建議 編輯組 編(2005),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年計劃的建議 輔導讀本》, 北京: 人民出版社.
- 胡鞍鋼(2004), 《中國: 新發展觀》,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胡鞍鋼(2003b), 《中國大戰略》,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胡鞍鋼(2002), 《國家戰略構想》,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胡鞍鋼·門洪華(2005), 《中國: 東亞一體化新戰略》,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胡鞍鋼·王亞華(2005), 《國情與發展》,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Cai, Youngshun (2002), The Resistance of Chinese Laid-off Workers in the Reform Period, *The China Quarterly*, no. 170.
-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2005), 2005 *Economic Review-China*, (ECO/EDR 2005, 12).
- Funabashi, Yoichi, Oksenberg Michael, Weiss Heinrich (1994), *An Emerging China in a World of Interdependence*, New York: The Trilateral Commission.
- Gang, Gao, Leadership Transition, Intra-party Democracy and Institution in China, *Asian*

Survey, XLIV. no. 2 Mach/April.

Hu, Shaohua (2000), *Explaining Chinese Democratization*, Prager.

OECD (2005), *2005 Economic Review-China*, OECD.

Rand (2002), "China's Continued Economic Progress; possible Adversities and Obstacles", *5th Annual CRF-RAND Conference*, Beijing, Oct. 31- Nov.

Shambaugh, David (2000), *Is China Unstable? Assessing the Factors*, M.E. Sharpe.

Swain, Michael D., Ashley J. Tellis (2003), *Interpreting China's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Wolf, Charles, JR. K.C Yeh et al. (2003), *Fault Line in China's Economic Terrain*,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World Bank (1987), *China: long term development issues and option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World Bank (1997), *China 2020: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 New Century*. 3.

China's Sustaining growth and Structural Limits: Based on Political-social Bottlenecks

Heeok Lee*

Widely divergent views about China's future are prevalent among analysts. The focus of this paper has been on the potential adversities or bottlenecks facing China's political stability and affecting its prospects for sustaining high growth through the coming decades. In considering what might go seriously wrong in China's future, this paper have concentrated on massive unemployment, serious economic disparity, 'three peasant (*sammong*) problems. Even though Hu Jintao's government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the seriousness of problems, the socio-economic strategy mainly focuses on escaping bottleneck section rather than diminishing these structural bottlenecks. In other words, China's strategy and policies is not enough to resolve the bottlenecks. This paper especially cannot deny the possibility of an bottlenecks during 2010~2015 at the same period. It furnishes a key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how to pass over the bottleneck section and to institutionalize balanced growth. This paper can provid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ountermeasure and suggestive points the interpretation in China's future.

*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Hanshin University

